

입법정책정보

-제19호-



대전광역시의회

○ 입법정책정보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회,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의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개정 사항과 최신 외국정보 등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세계법제정보센터에서 참고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 대전광역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매월 정기적으로 제공됩니다.

|| 목 차 ||

I. 상위법령 제·개정	1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2. 약사법 시행규칙	4
II. 다른 자치단체 조례 제·개정	7
1. 부산광역시 에어컨 실외기 관리 지원 조례	7
2. 인천광역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	9
3. 부산광역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11
4. 대구광역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조례	14
III. 자치법규 참고정보	17
IV. 최신 외국 입법정보	22

I 상위법령 제 · 개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7. 10.] [대통령령 제34639호, 2024. 7. 2., 일부개정]

□ 제정 · 개정 이유

- 산학융합지구의 지정 권한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하고, 비수도권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체는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자산유동화 등의 방법으로 처분 후 임차하는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955호, 2024. 1. 9. 공포, 7. 10. 시행)됨에 따라, 시·도지사가 산학융합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산학융합지구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하고, 입주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한 자산유동화 등의 계약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 입주기업체의 편의를 위해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서비스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입주기업체가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투자에 활용할 수 있도록 처분제한의 예외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주요내용

제29조의5(산학융합지구 지정) ① ~ ③ (생략)

④ 시·도지사는 법 제22조의4제4항에 따라 산학융합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

1. ~ 6. (생략)

제29조의6(산학융합지구의 변경) ① 법 제22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학융합지구로 지정을 받은 자는 산학융합지구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2조의4제5항에 따라 산학융합지구의 변경을 시·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산학융합 활성화 계획에 대한 수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때에는 산학융합지구의 지정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법 제22조의4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2. 산학융합지구의 변경 필요성이 인정될 것
3. 산학융합 활성화계획에 대한 수정계획이 타당할 것
-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산학융합지구를 변경한 경우에는 제29조의5제4항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
- ④ 법 제22조의4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산학융합지구를 지정한 경우의 지정변경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 ⑤ 제29조의5 및 이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학융합지구의 지정·변경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4. 7. 2.>

제29조의7(산학융합지구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도지사는 법 제22조의4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산학융합지구를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산학융합지구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제2항에 따른 산학융합지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② 법 제22조의4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산학융합지구의 지정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산학융합지구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산학융합지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시·도의 부단체장으로서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에서 산·학·연 협력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그 밖에 산·학·연 협력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⑤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⑥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⑦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43조의5(산업단지 내 국유지와 공유지의 매각 및 임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산업단지 안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또는 공장건축물, 그 밖의 시설(이하 “공장등”이라 한다)을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에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의 매각가격 또는 임대가격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1. 해당 토지 또는 공장등에 투입된 재원내역서

2. 가격산출조서

3. 토지 또는 공장등의 면적 및 도면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토지 또는 공장등의 매각가격 또는 임대가격을 정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④ 법 제34조에 따른 산업단지 안의 토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기간은 10년을 기준으로 하되, 임대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임대기간 연장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에 대한 임대료의 납부시기·납부방법과 연체료 및 체납금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며, 공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에 대한 임대료의 납부시기·납부방법과 연체료 및 체납금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단지 안에 있는 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을 「국유재산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에 관리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위탁의 기간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을 해당 목적사업에 이용할 때까지로 할 수 있다.

약사법 시행규칙

[시행 2024. 7. 12.] [보건복지부령 제1030호, 2024. 7. 12., 일부개정]

□ 제정·개정이유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을 판매하는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약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의 지정기준으로 지역주민의 접근이 쉬운 곳에 위치하고 심야시간대 운영시간을 준수할 수 있는 근무인력을 갖추는 것을 정하고, 공공심야약국의 심야시간대 운영시간을 원칙적으로 매일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약국개설등록 신청서식, 약국개설자 지위 승계 신고서식,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식에서 등록기준지 기재란을 각각 삭제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주요내용

제11조의3(공공심야약국의 지정기준)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공공심야약국(이하 “공공심야약국”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주민의 접근이 쉬운 곳에 위치할 것
2. 제11조의5에 따른 운영시간을 준수할 수 있는 근무인력을 갖추는 것
3. 약국개설자가 공공심야약국 지정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약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의료법」, 그 밖에 약사에 관한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경고 또는 시정명령은 제외한다)을 받은 이력이 없을 것

[본조신설 2024. 7. 12.]

제11조의4(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약국개설자는 별지 제7호의3서식의 공공심야약국 지정 신청서에 약국개설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하는 경우 별지 제7호의4서식의 공공심야약국 지정서를 발급하고,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 휴무일 운영기준 등 준수사항을 서면으로 함께 교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7. 12.]

제11조의5(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 ① 법 제21조의3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심야시간대” 및 법 제21조의3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의 운영시간”이란 매일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를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내 공공심야약국의 효율적·탄력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야시간대의 운영시간은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의 범위에서 3시간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7. 12.]

제11조의6(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취소) ① 법 제21조의3제5항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의4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 또는 제11조의5에 따른 운영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2. 약국개설자가 공공심야약국 지정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② 법 제21조의3제5항에 따라 공공심야약국 지정이 취소된 약국개설자는 지체 없이 공공심야약국 지정서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7. 12.]

□ 참고사항 (우리 시 관련 조례)

「대전광역시 공공심야약국 지원조례」

[시행 2016.12.30.] (제정) 2016-12-30 조례 제 4832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심야시간에 의약품 구입에 따른 시민의 불편 해소 및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공공심야약국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개설 등록된 약국으로서, 시민에게 심야시간에 의약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제3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운영) ① 시장은 시민에게 심야시간에 의약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심야약국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운영하는 공공심야약국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근무약사의 의무) 공공심야약국 근무약사는 약사윤리기준, 약사윤리강령 및 운영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공공심야약국의 지도·감독) 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이용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사한 결과, 이용실태가 저조하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공심야약국 지정·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제6조(사업비 환수)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은 약국에서 「약사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지원 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다.

II 다른 자치단체 조례 제·개정

부산광역시 에어컨 실외기 관리 지원 조례

[시행 2024. 7. 3.] [부산광역시조례 제7333호, 2024. 7. 3., 제정]

□ 제정이유

여름철 냉방기기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공동주택의 에어컨 실외기 관련 화재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활동 지원사업 및 지원대상 등에 대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근거하여 공동주택의 에어컨 실외기 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를 예방하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등 시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2. “에어컨 실외기”란 건축물에 설치하는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와 배기장치를 말한다.
3. “안전활동”이란 에어컨 실외기로 인한 화재예방을 위하여 에어컨 실외기 관리에 관한 교육과 정기적인 점검 홍보 등을 통하여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화재 등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4. “공동주택단지”란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를 말한다.
5.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의 에어컨 실외기 관리와 안전활동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사업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 ① 시장은 공동주택의 에어컨 실외기 관리와 안전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에어컨 실외기 관리 및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주민 안전교육과 홍보 및 캠페인
 2. 에어컨 실외기 점검과 안전에 필요한 관리요령의 개발·보급

3. 공동주택 시설관리자 대상 에어컨 실외기 관리·점검 교육훈련 지원
 4. 에어컨 실외기 설치개선 및 관리 방안에 대한 전문가 자문 등
 5. 그 밖에 에어컨 실외기와 관련된 화재의 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범위와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지원대상)

-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부산시 내 공동주택단지에 한해 지원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 ② 지원대상 선정기준 및 방법에 대해서는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공동주택의 에어컨 실외기 관리와 안전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군, 소방재난본부, 관련기관·단체,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재정 지원에 관하여는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인천광역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

[시행 2024. 7. 17.] [인천광역시조례 제7328호, 2024. 7. 17., 제정]

□ 제정이유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에(2023.6.14. 시행) 따라 이륜자동차 운행 시 발생하는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시민들의 주거환경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륜자동차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민이 쾌적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소음·진동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와 「자동차관리법」 제2조 및 제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

-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륜자동차 소음관리 및 소음피해 예방을 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② 시민은 이륜자동차 소음피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추진하는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 ① 시장은 이륜자동차 소음 피해를 방지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이륜자동차 소음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관한 기본정책
 2. 군·구 및 연도별 이륜자동차 소음 저감대책 추진현황
 3. 이륜자동차 소음 점검을 위한 시와 군·구 협력에 관한 사항
 4. 이륜자동차 소음 저감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계획
 5. 관리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경비의 산정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시장은 관리계획 수립과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군수·구청장 및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추진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교육)

- ① 시장은 시 및 군·구의 업무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홍보사업) 시장은 이륜자동차 소음저감을 위한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재정지원 등) 시장은 이륜자동차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구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시행 2024. 7. 3.] [부산광역시조례 제7335호, 2024. 7. 3., 제정]

□ 제정이유

장애인체육의 권장·보호 및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실질적으로 정함으로써 체육을 통한 장애인들의 건전한 여가활동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28조 및 제29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장애인체육의 진흥과 기술적·행정적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체육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생활 등을 위한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으로 생활체육 및 전문체육을 말한다.
3. “장애인 선수”란 대한장애인체육회 통합정보시스템에 경기단체 선수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4. “장애인체육 지도자”란 체육 관련 소정의 국가자격을 갖추고 장애인체육 활동에 참여하여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장애인체육 동호회”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에 지속적·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으로 대한장애인체육회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승인된 단체를 말한다.
6. “장애인체육 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운영, 장애인체육 단체 지원 및 선수 육성 등의 시책을 적극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시에서 운영하거나 지원하는 체육 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인의 유형 및 정도·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체육 진흥계획의 수립)

- ① 시장은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체육 진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체육 진흥계획은 「부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제5조의 체육진흥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장애인체육 진흥사업)

- ① 시장은 장애인이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장애인 체육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 및 동호회의 활동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 선수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장애인 실업팀 확대 및 지원
 3. 장애인 생활체육의 육성과 보급
 4. 장애인체육 경기대회 개최 및 국내외 교류
 5. 장애인 선수 및 장애인체육 지도자의 발굴 및 육성
 6. 장애인체육 지도자 및 체육활동 보조 인력의 배치
 7.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8. 장애인체육 활동 관련 정보제공 및 인식개선
 9.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10.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시장은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장애인체육 시설)

- ① 장애인체육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시장은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장애인체육 시설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편의 제공) 시장은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편의시설 및 체육용 기구 설치
2. 장애인체육 활동의 편의를 위한 장비 등의 사용설명 내용이 포함된 영상물 및 책자의 비치
3. 장애인이 경기를 관람하기에 적절한 관람석 위치 지정
4.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체육 활동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포상) 시장은 장애인체육 진흥과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제5조,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 및 구·군 장애인체육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7. 10.] [대구광역시조례 제6153호, 2024. 7. 10., 제정]

□ 제정이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지자체장의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규정이 제정(23.3.)됨에 따라, 집합건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 제고 및 관련 분쟁 예방을 통하여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 확보 및 집합건물 소유자와 점유자 등의 참여 활성화를 통한 집합건물 이용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집합건물”이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을 말한다.
2. “점유자”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점유하는 자로서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를 말한다.
3. “관리단”이란 법 제23조에 따라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단체를 말한다.
4. “관리인”이란 법 제24조에 따라 선임된 자를 말한다.
5. “관리위원회”란 법 제26조의3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책무)

- ① 대구광역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시책 마련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군수는 해당 관할의 집합건물의 관리·감독을 성실히 수행하고,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③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점유자·관리인 등 이해관계인은 집합건물의 이용편의 증진과 집합건물에 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집합건물 관리계획의 수립)

- ① 시장은 집합건물의 관리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집합건물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집합건물 관리 추진에 관한 사항
2. 집합건물 관리를 위한 주요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과 재원 마련 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집합건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집합건물의 관리) 시장은 집합건물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연구·조사
2.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관리에 관한 사항
3. 구분소유자·점유자·관리인 등 이해관계인의 법적 권한과 의무 안내·지원
4. 집합건물 표준규약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5. 집합건물 관리의 감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집합건물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6조(집합건물관리센터의 설치·운영)

- ① 시장은 집합건물 관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집합건물관리센터(이하 “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민원의 접수, 상담에 관한 사항
2. 관리계획 시행
3.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5. 집합건물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집합건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7조(교육·홍보) 시장은 집합건물 관리에 필요한 교육·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리단, 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을 위한 안내
2. 관련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3. 관리단, 관리위원회, 관리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4. 집합건물 회계관리 관련 교육
5. 그 밖에 교육·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업무의 협조) 시장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과 집합건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청장·군수,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 집합건물의 이해관계인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시장은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에게 법 제 26조의5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령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내용과 기한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시장은 감독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집합건물을 관할하는 구청장·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보 하여야 한다.
2. 보고 및 자료 제출 명령을 받은 관리인은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시장에게 보고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이행하지 못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15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3. 관리인은 사무 보고 및 자료 제출에 필요한 장소와 장비를 제공할 수 있으며, 그 장소에서 해당 사무를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III 자치법규 참고정보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소개 1.

[안건번호: 의견24-0149 / 요청기관: 경기도 시흥시]

□ 의뢰안건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하여 시흥시장으로 하여금 매년 시흥시 체육회 및 시흥시 장애인체육회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합계액을 전전년도 시세 수입결산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으로 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주요내용

[질의요지]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하여 시흥시장으로 하여금 매년 시흥시 체육회 및 시흥시 장애인체육회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합계액을 전전년도 시세 수입결산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으로 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지방자치법」은 의결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독자적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 예산에 관하여는 제47조제1항제2호 및 제142조제1항에서 예산의 심의·확정권을 지방의회에, 예산안의 편성권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부여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법」상 예산 편성 및 확정과 관련하여 집행기관과 의결기관 간에 권한을 분리·배분하고, 지방의회에서 예산안에 대한 심의 및 결산 승인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예산 집행에 대해 사후에 감시·통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는 취지를 고려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사무에 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각주: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추87 판결 참조).

또한,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제116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법령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관리하고 집행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치사무와 관련하여 조례가 제정된 경우 조례에 따라 업무를 집행할 권한과 의무를 갖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조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할 때에는 실제 집행 가능한 범위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각주: 법제처 2021. 5. 18. 의견제시 21-0151 참조).

그런데, ‘시흥시 체육진흥 조례안’은 시흥시 체육 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흥시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으로서(제1조), 제6조제3항에서는 시흥시장이 매년 시흥시 체육회 및 시흥시 장애인 체육회의 운영을 위해 지원하는 보조금과 체육진흥을 위해 지원하는 보조금의 합계액은 전전년도 시세(「지방세기본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시·군세를 말한다)의 수입결산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으로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려는 것인바, 이 사안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을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하여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살피건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예산편성권에는 예산으로 편성하는 금액을 얼마로 할 것인지에 관한 결정이 당연히 포함되므로, 시흥시장으로 하여금 체육회 등에 대한 보조금을 시세수입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으로 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시흥시장에게 일정 수준의 금액을 반드시 예산에 책정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한 예산편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예산 편성 상황에 따라서는 집행을 담보하기 곤란한 의무를 시흥시장에게 부과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각주: 법제처 2021. 5. 18. 의견제시 21-0151 참조), 조례 입안에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소개 2.

[안건번호: 의견24-0165 / 요청기관: 서울특별시 관악구]

□ 의뢰안건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을 지방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주요내용

[질의요지]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을 지방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의견]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법령의 범위”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를 의미하고,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법령과 조례의 각 규정 취지, 규정의 목적과 내용 및 효과 등을 비교하여 양자 사이에 모순·저촉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각주: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추5050 판결 참조).

먼저, 「청소년활동 진흥법」(이하 “청소년활동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호 각 목에서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종류를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 집 등으로 정하고 있고, 제11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활동법 제10조제1호가목에 따른 청소년수련관(제2호) 등의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6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이하 “청소년단체”라 한다)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 및 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고,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

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를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1조제1항에서는 지방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6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법 제2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단을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6조제2항에서는 지방공단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같은 법 제71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청소년활동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을 청소년단체가 아닌 지방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문제 됩니다.

살피건대, 행정권한의 위탁은 행정기관의 장이 그 권한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맡겨 그 수탁기관의 장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권한의 법적인 귀속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법률에서 위탁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될 것인데,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 관하여 위임·위탁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의 규정은 다른 법률에서 해당 업무에 대하여 위임·위탁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일반규정이라 할 것인바,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 위탁은 개별 법률인 청소년활동법에서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소년활동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13. 12. 27. 회신 13-0587 해석례 참조).

그런데, 청소년활동법 제16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는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의 수탁기관을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등 청소년단체로 한정하여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각주: 법제처 2017. 3. 6. 회신 17-0034 해석례 참조),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을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아닌 지방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이러한 청소년활동법 및 관련 법령의 취지에 위배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지방공기업법」 제71조제1항 및 제76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공단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을 ‘대행’할 수 있으므로 해당 규정을 근거로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을 지방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행정업무의 대행’은 행정기관이 법령상의 업무를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사실상 행하게 하되, 그 명목과 책임은 원(原)권한자인 행정기관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것으로, 이러한 대행은 행정기관의 권한을 공공단체 또는 사인에게 법적으로 이전하여 행정권한을 수탁받은 자가 그의 이름으로 행정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그 행정권 행사의 법적 효과 또한 수탁자에게 귀속되는 ‘위탁’과는 차이가 있는바(각주: 법제처 2023. 4. 28. 의견제시 23-0110 참조), 해당 규정을 근거로 청소년

수련시설의 운영을 지방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을 지방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IV 최신 외국 입법정보

브라질, 자동차 산업의 탄소 배출 감소를 위한 「그린모빌리티혁신법」 시행

□ 주요내용

브라질 정부는 탄소 배출 감소를 위한 환경친화적 차량과 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기술 및 제품의 개발 촉진 정책을 담은 「그린모빌리티혁신(Mobilidade Verde e Inovação) 프로그램에 관한 법률」을 2024년 6월 28일에 공포 · 시행하였다. 그린모빌리티혁신 프로그램은 산업통상부가 브라질 자동차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만든 프로그램이며, 이를 통해 새로운 프로젝트, 바이오 연료 사용, 전기 자동차 및 재활용 설비 등에 투자하는 자동차 업체에 2028년까지 총 190억 헤알(35억 달러)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그린모빌리티혁신 프로그램 이전에 브라질 정부는 자국 자동차 산업을 지속 성장 가능하고 경쟁력을 갖추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노바 아우토(Inovar Auto, 2013년-2017년 시행), 호타 2030 (Rota 2030, 2018년-2024년 초 시행) 프로그램을 추진했다. 이노바 아우토는 자동차 부품의 수입 의존도를 낮추는 데 중점을 두었다면, 호타 2030은 자동차 회사의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투자 강화 등에 중점을 두었다. 호타 2030을 대체한 세 번째 프로그램인 그린모빌리티혁신은 환경친화적 에너지원 개발과 탄소 배출 절감 및 미래기술 투자 강화 등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 법에 따라 탄소 배출 절감을 위해 기존의 탄소 배출 측정방법이 변경될 예정이다. 현재는 자동차 엔진에서 배출되는 가스의 탄소 배출만 측정하지만, 이법 제2조제5항에 따라 2027년부터 엔진에서 배출되는 가스뿐만 아니라 협력업체의 생산 공정을 포함한 전체 자동차 제조과정에서의 탄소 배출을 측정 · 관리할 예정이다.

본 프로그램의 적용으로 향후 마일드 하이브리드 전기차량의 생산 및 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모빌리티 관련 컨설팅 회사인 브라이트 컨설팅(Bright Consulting)에 따르면 현재 브라질에서 생산되는 차량의 88%에 해당하는 가솔린 엔진 차량의 수가 2030년에는 39.17%로 감소하고, 마일드 하이브리드 전기차의 비율은 31.58%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한다.

현재 많은 자동차 업체가 탄소 배출 감소를 위한 투자계획을 발표하고 있으며, 폭스바겐은 2028년까지 16개 모델 생산 및 4개 공장에 160억 헤알(32억 달러), 현대자동차는 2032년까지 54억 헤알(11억 달러) 규모의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브라질자동차제조업협회(Anfavea)는 자동차 업계가 향후 5년간 연구개발에 투자할 금액은 약 600억 헤알(11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브라질, 자동차 산업의 탄소 배출 감소를 위한 「그린모빌리티혁신법」 시행 ”,
공공누리 제1유형, 2024. 7. 25.